‘위험물질’ 삼중수소 검사법 없어…방사능 정밀 검사 한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남 수산물 안전한가

〈하〉 방사능 검사 매뉴얼 시급

DNA변형 일으킬 수 있어…어민들 “정부 대비 없이 수수방관” 분통

전남도, 세슘·요오드 검사 수산물 65종서 전 어종 확대 등 대책 고심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도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법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전국 생산량의 60%나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전남 수산물에 대해서는 세슘과 요오드 검출 검사만 이뤄지고, 삼중수소 검출 검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이미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검사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전남 어촌 붕괴를 막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수산물에 있는 삼중수소를 측정하는 검사법은 아직 개발 중이고, 개발 완료 시기는 미정이다고 밝혔다.

삼중수소는 방사성 물질의 일종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는 설비(ALPS·다핵종제거설비)를 통해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됐다.

일부에서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체내에 축적돼 세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삼중수소는 액체 상태로 인체에서 혈액·세포·장기 등 어디로든 흡수된다”며 “이 중 일부는 DNA변형을 일으켜 내부 피폭 위험이 다른 방사성 물질보다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희석해 방출한다고 하지만,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며 “방사성 물질 방출 총량을 고려해 환경 축적과 체내 영향을 전반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중수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방사성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큰 만큼, 정부가 수산물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검사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기 목포시 대반 어촌계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것이 몸에 안 좋다고 하면 수요가 확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며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수산물 소비가 감축되고 있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부에서 제대로 대책을 세워 불안감을 없애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찬욱 고흥군 어촌계연합회장도 “일본이 몇 해 전부터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삼중수소 검사법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비하지 않고 수수방관해 어민들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는 오는 12일 전국어민총회연맹 전남본부 연맹원 2만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처럼 수산물 삼중수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늦어지면서 전남에서 제대로 된 검사는 내년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전남 양식장과 위판장에 나오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검사는 전남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담당하는데, 식약처에서 삼중수소 검사 표준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으면서 준비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금 삼중수소 검사법이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 정도가 돼야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삼중수소 검사를 위한 장비를 새로 구입하고, 실무자 교육을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오염수가 방류되면 현재 수산물 65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세슘과 요오드에 대한 검사를 전 품종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삼중수소 검사법이 정해지면 장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료를 들고 광주 식약처를 방문해 검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광주·전남 250개 단체가 모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광주·전남공동행동’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검사법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전남 어촌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전남도의회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 제정을”

시민단체, 오염수 안전 대책 촉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류조치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의준(완도 2)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분야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을 통해 피해 어업인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취지가 담겼다.

신 의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위원회 설치, 피해대책 종합계획 수립, 수산업 피해 보전, 판매 촉진 등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를 시급히 마련하고 농·어업 재해에 방사능 오염 등 사회 재난도 별도로 규정해 피해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교육관련 시민단체도 같은 날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에 학교 급식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방사능 검사장비 추가구매, 검사횟수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학교급식 안전대책 강화와 이에 앞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수능 모의평가 ‘집중 또 집중’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열린 1일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정광고등학교에서 3학년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여
전역 넉달 앞둔 사회복무요원 ‘안타까운 죽음’

전역을 불과 4개월 앞둔 사회복무요원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지난 31일 낮 12시께 광주시 서구 유촌동 서구북구선거관리위원회 통합청사 앞 횡단보도에서 선관위 사회복무요원 A(22)씨가 1t트럭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횡단보도 녹색 신호를 받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뀐 지 4초 가량 지난 시점이었으나, 1t트럭 운전자 B(62)씨는 이를 무시하고 직진하려다 시속 50㎞ 속도로 A씨를 충격했다. B씨는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오는 10월 전역해 대학 3학년생으로 복학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어머니 C(54)씨는 “일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 집안 일을 도맡아 하고 나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착한 아들이었다”며 “전역하고 나면 일본으로 가족여행을 떠나자고 했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A씨는 부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며 공부해 매년 장학금을 타며 대학생활을 했으며, 교수 추천을 받아 일본 답사를 다녀오는 등 성실한 학생이었다. 또 학창시절부터 공무원을 꿈꿨던 A씨는 선관위에서 복무하면서 공무원 꿈을 더욱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왜 교제 거절해” 3시간동안 895회 전화 스토킹

‘사귀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여성에게 3시간동안 900여 차례 연락을 한 20대 스토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새벽 1시 40분께부터 4시 40분께까지 B씨에게 895차례 전화를 걸고 6번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온라인 모임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사귀자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지난해 8월 B씨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895회의 전화 중 131회는 발신자표시가 되게 전화를 했지만 그 이후 760여 차례는 발신표시제한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A씨의 번호를 차단해 실제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수신 기록만으로도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왜 험담해” 인터넷방송 진행자 집 방화 시도

인터넷 방송에서 자신과 남자친구에 대해 험담을 한 방송 진행자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새벽 4시 10분께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자 B씨의 광주시 서구의 공동주택에 찾아가 복도에 불을 지르고 집안에 들어가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고 밀치며 폭행한 혐의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자신과 남자친구를 험담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방화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